

A8-55
Mc.a.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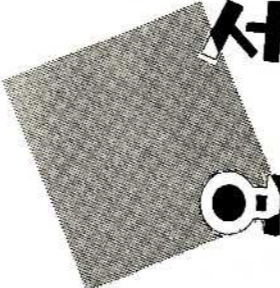
서울시정 · 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

■ 1996. 6. 25. 오후2시
■ 프레스센터 19층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 269-5763~5

서울시정 · 시의회 1년 여성정책평가
● 1996 ●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정 · 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

■ 1996. 6. 25. 오후2시

■ 프레스센터 19층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 269-5763~5

행 사 순 서

△ 사 회 :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제 1 부

□ 인 사 말 / 이 경 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격 려 사 / 이 세 중 (시민지원기금 이사장)

□ 감사패 증정 *60%*

여성발전기금 마련 / 조 순 (서울시장)

금식예산 270억 조성 / 문일권 (서울시의회 의장)

96년 1200억

97년 200억

96년 1200억, 80% 증가 → 2000억 달성할 계획

• 제 2 부

□ 주제발표

서울시정 시의회 1년 여성정책을 평가한다.

: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논평

김범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교수)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 토론

인 사 말

..... 6

서울시정, 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

I 들어가며 10

II 통계로 본 서울시 여성의 특징

- 연구 · 사회적 특성 12
- 노동시장 참여특성 17

III 서울시 여성관련사업

- 사업내용 24
 - 1.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24
 - 2. 여성의 능력개발 28
 - 3. 요보호여성 지원강화 29
 - 4. 보육사업 확대 33
 - 5. 학교급식 운영지원 38
- 예 산 39
- 여성관련 조직체계 42

IV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관련성 44

V 서울특별시 의회활동(속기록을 중심으로) 47

1. 서울특별시 의회 활동 현황 47

2. 분석의 한계 49

3. 분 석 49

VI 맺 음 말 69

VII 참고문헌 72

논 평

I 김범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4

II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교수) 78

III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81

부 록

I 여성관련 발언 내용 요약 84

II 서울시의원 명단 97

III 각종 위원회 개요 99

IV 여성관련시설 현황 103

V 여성관련조례 108

‘자치’나무에 맺힌 초록빛 물기와 희망...

민선단체장에 의한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성큼 본궤도에 올려놓으리라는 모두의 기대 속에 6·27선거가 실시된지 벌써 1년입니다.

지난 1년동안 대다수 사람들은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식, 생활여건의 편리와 합리화 등 과거 관선단체장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를 실제로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약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단체장들을 향한 불만높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명을 웃도는 서울시 여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민선단체장 출범 1년을 맞아 우리 여성민우회에서는「서울시의 여성정책과 시의회 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민선자치 1년이 가져온 변화는 상당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60억을 조성하고, ‘서울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성정책보좌관을 두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또한 여성의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교육의 사회 분담을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급식의 완전실시와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면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그루의 나무에 초록빛 생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반면 21세기를 내다보며 여성들이 한 사람의堂堂한 사회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사업은 아직 풀뿌리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1년을 넘어서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창조성과 효용성 이전에 인간 중심의 사회로 먼저 자리잡아야 할 것이고, 이는 서울시 뿐만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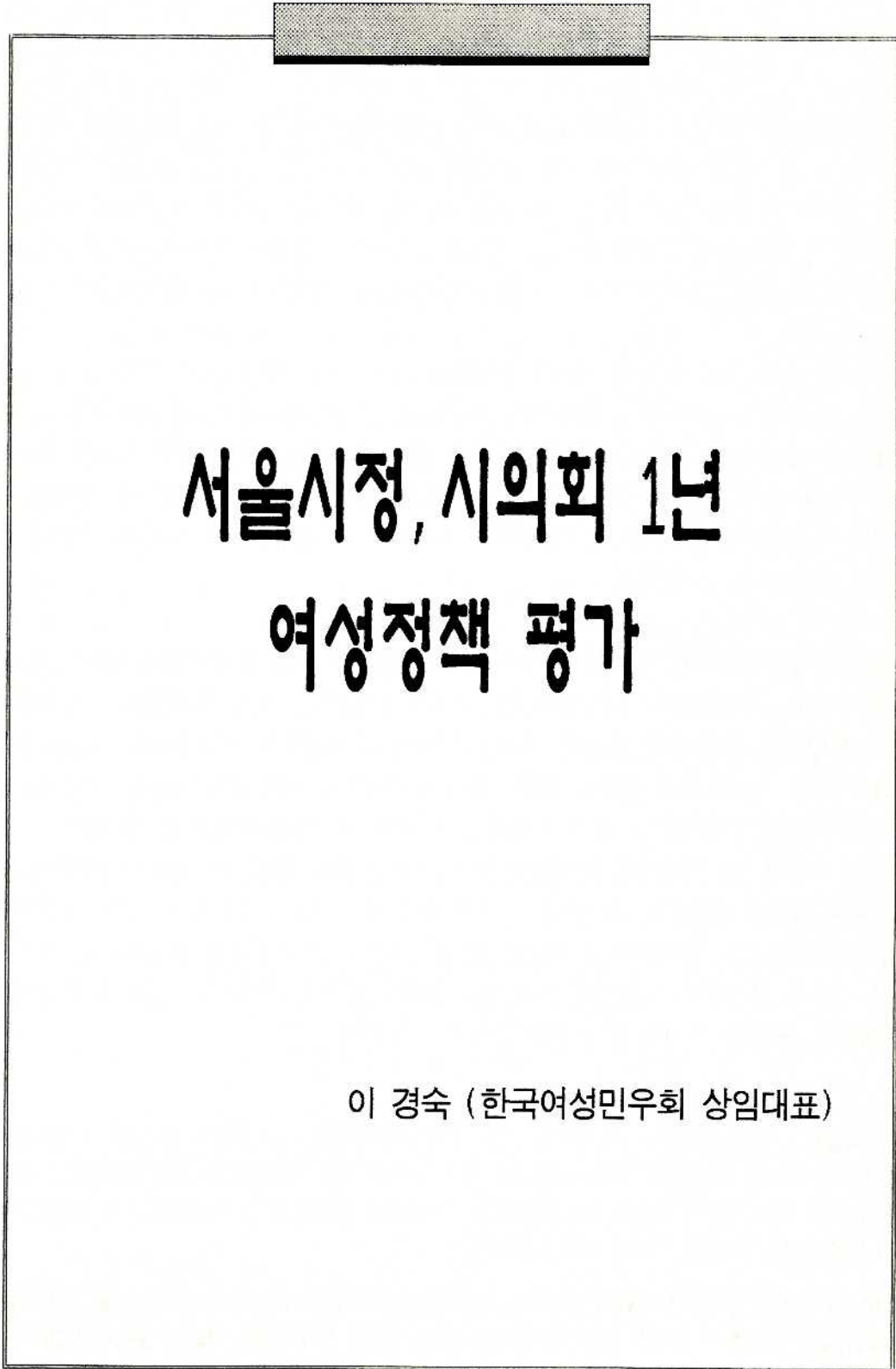
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들의 변화된 특성에 맞추어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방향전환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와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최소복지 차원에 머물렀던 정책으로는 여성들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미래의 상을 기본적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500만을 훨씬 웃도는 서울시 여성들이 소외된 정책! 2,000만 여성들이 함께 하지 않는 행정이 무슨 ‘사람 중심’의 정책이고 행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습니까?

민우회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정책과 서울시의 활동을 평가하는 이번 자리를 통해 서울시 여성들의 요구가 시정 및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되고,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서울시가 충분히 하고, 시민들의 자치의식을 토대로 ‘사람’중심의 도시로 서울시가 거듭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은 의회와 행정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때 가능하다는 인식 속에 우리 민우회 역시 좀 더 주체적으로 의정활동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록빛 물기가 잎사귀 잎사귀마다 피어오르는 그리 멀지않은 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물꼬역할을 더욱 깊이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있는 비판을 기다리며, 끝으로 방대한 회의록을 꼼꼼히 분석하느라 연일 잠을 설친 민우회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1996년 6월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정, 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

이 경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들어가며 ●●●●●

지난 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또한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91년 선거보다 많은 여성위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그 1년을 맞아, 지방정부중에서도 가장 중요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1)여성정책과 이를 감시하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남은 2년간의 여성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천만 서울시민중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순 민선 시장은 여성정책보좌관제 신설과 '부녀복지과'를 '2)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여성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시정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전과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여 속단할 수 없지만 여성전담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정책의 내용과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현대산업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여성관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도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해방직후 문맹퇴치, 계몽에 목적을 두었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다. 현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는 크게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해방직후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저소득층대상의 생활보호와 요보호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기조 또한 개인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잔여주의적 접근과 현존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문화의 영향이 컸으므로, 앞으로 여성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요구한다.

1) 여성정책의 범위는 서울시 여성복지과 사업, 세계화추진위원회 10대과제('95 발표)를 중점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여성에게 부과된 가족부양 영역 가운데 급식, 탁아문제가 중점 거론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노인·장애자 가운데 여성들의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서울시정의 여성관련 조직 체계 항목에서만 여성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였다.

2) '여성복지'라는 용어는 '부녀복지'에 비하여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사회상황과 남녀평등을 달성하려는 현대여성들의 욕구를 더 강하게 반영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이 일찌기 있었다. (박정숙, 1986)

여성정책이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의 가치관과 정책집행과정의 여러 지원체계-예산,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정책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정책의 가치관은 여성관과 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즉 여성관에서는 양성평등 의식과 성별노동분업의 인정 여부를,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활동을 가족과 시장 기능에 맡기는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측면중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 사업내용, 대상 등이 달라지면서 결국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책집행의 여러 지원체계로서 예산투여 정도와 조직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이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세워져도 예산부족과 권한의 한계 등으로 전시행정에 그친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업내용, 전담조직체계 및 권한, 예산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속에 서울시정·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작업은

첫째, 서울시 여성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서울시 여성관련사업을 평가하고

둘째,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지방정부인

서울시 여성정책의 관련성 정도를 밝히며

셋째,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여성관련 사안을 어느정도 다루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여성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1년정도의 활동으로 여성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이 성급한 측면도 있지만 남은 임기동안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과 타지방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로 본 서울시 여성의 특징

서울시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이전에 서울시 여성의 특징을 통계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상황에서 지역간, 성별간의 차이를 재조명하고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여하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자료가 남녀구분이 잘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내에서 통계상에 나타난 서울시 여성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I. 인구·사회적 특성

서울시 인구는 10,759,454명으로 전국인구 45,575,215명의 23.6%가 되며, 여성인구(5,350,627명)의 구성비는 49.73%로서 전국 49.68%와 거의 비슷하다.

[표2-1] 서울시 연령별 성별인구 구성비 (1994년도)

연령	계		남		여		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0-4세	789,231	7.3	416,788	7.7	372,443	7	47.2
5-14세	1,576,431	14.7	825,740	15.3	750,691	14	47.6
15-60세	7,689,998	71.5	3,896,633	72	3,793,365	70.9	49.3
60세이상	703,794	6.5	269,666	5	434,128	8.1	61.7
계	10,759,454	100.0	5,408,827	100.0	5,350,627	100.0	

서울특별시, 서울 통계연보(1995). *외국인 제외

서울시 성별 인구(외국인 제외)의 구성비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많고, 60세 이상은 여성이 많다. 60세 이상이 되면 여성 비율이 61.7%로 164,462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없는 노인여성이 많고, 이들의 생활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유년인구가 생산연령층이 되는 시점에서 볼 때 생산연령층에

비해 노년피부양인구가 증가, 그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노인에 대한 연금,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표 2-1 참조)

[표2-2] 세대 구성분포(1990)

지역별	계	1세대	2세대	3세대이상	단독비혈연
전국 세대수	11,354,540	1,219,667	7,529,077	1,418,091	1,187,705
비율	100.0	10.7	66.3	12.5	10.5
서울 세대수	2,814,845	262,864	1,974,173	281,332	296,474
비율	100.0	9.4	70.1	10.0	10.5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인구이동율과 세대구성분포, 기혼여성 가구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 서울시 인구이동율(1994년)은 전입율이 20.8%(전국:19.8%), 전출율이 22.5%(전국:19.8%)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1990년부터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1994년 현재 3,455,665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3.1명이며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는 선진국 평균가구원수 2.8명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가구 크기의 감소는 국가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핵가족으로의 이행과 출산자녀수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반면 선진국은 미혼단독가구의 증가와 고연령세대의 단독가구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세대구성 분포를 보면 단독비혈연가구는 전국보다 조금 높고 2세대이상 가구수가 80.13%로 전국 78.8%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3세대 이상 가구는 전국보다 낮고 2세대 가구는 전국보다 높아서 핵가족화에 따른 여성의 양육책임은 전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노인부양 책임은 전국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표2-3] 혼인상태별 가구분포(1990)

지역별		계	유배우	사별	이혼	기타
전국	세대수	11,354,540	9,043,700	1,195,754	174,245	940,841
	비율	100.0	79.7	10.5	1.5	8.3
서울	세대수	2,814,845	2,234,127	220,311	56,164	304,243
	비율	100.0	79.4	7.8	2.0	10.8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혼인상태별 가구분포를 보면, 유배우가구의 비율이 전국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혼(+0.5%)과 새로운 형태의 가구(+2.5%)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속도가 빠르고(1980년 1.1%에서 1990년 2% 증가), 1990년 현재 40-49세 연령집단의 이혼구성비(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가구 형태가 전국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핵가족중심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사별의 경우 전국보다 낮지만 22만 가구가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은 55,449명이고 여성은 390,957명이며, 이혼한 남성은 27,302명이고 여성은 47,338명으로 모자가정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사별과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없는 세대는 276,475세대로 결손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3 참조)

1995년말 현재 서울특별시 내부 자료에 의하면 11,185세대에 27,660명의 모자가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24세(17), 25-29세(230), 30-34(1,609), 35-39세(3,965), 40-44세(3,167), 45-49세(1,375), 50-54세(538), 55-59세(171), 60세 이상(113)으로 3,4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모자세대(10,207세대)의 생활등급별 분포를 보면 1등급(101세대), 2등급(183), 3등급(247), 4등급(947), 5등급(1,742), 6등급(3,216), 7등급(2,207), 8등급(976), 9등급(588)이며, 7등급(4인가족 기준 월 소득 86만1천원)이하 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모자가정발생 원인은 배우자사망(6,052세대), 이혼(2,623), 미혼모(655), 배우자로부터 유기(258), 가출(203), 기타(416)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세대수중에 보호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보건복지부, 모자가정조사결과, 1995)은 서울시의 경우 총 10,207세대중 7,268세대를 보호하고 있어 7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총 모자가정 51,935세대중 44,467세대(85.6%)를 보호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 내부자료에 나타난 모자가정 수치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수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일반통계에 나타난 모자가정수에 비해 지원모자가정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모자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2-4] 부양여성인구대 의존인구수 비율

지역별	전국		서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아동수(5세이하)(A)	3,945,151	30.4	938,830	27.7
노인수(65세이상)(C)	2,162,239	16.7	362,653	10.7
18-59세 여성인구	12,971,320	100.0	3,387,556	100.0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서울시통계연보(1995)

여성의 부양의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노인, 아동 의존인구수와 18-59세의 여성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낮게 나타나 노인에 대한 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참조)

한편 95년 현재 서울의 보육시설 상황을 보면 국·공립이 15.2%(전국:22.9%), 민간이 44.6%(전국:22.8%), 직장이 0.5%(전국:0.3%), 가정이 39.7%(전국:54%)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수용아동수에서도 국공립 35.4%(전국:64.5%), 민간시설 53.5%(전국:21.5%), 직장 0.3%(전국:0.1%), 가정보육 10.7%(전국:13.9%)였다. 서울지역 보육관련서비스의 경우 민간의존부문의 서울은 64.2%, 전국은 35.4%로 아동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서울시 성별 학력분포

학력구분	남	여	전체
재학	1,449,025(100.0)	1,260,460(100.0)	2,709,485
국민학교	597,918(41.2%)	544,110(43.1)	1,142,028
중학교	285,513(19.7)	258,015(20.5)	543,528
고등학교	317,174(21.9)	294,560(23.4)	611,734
전문대	22,712(1.6)	20,032(1.6)	42,744
대학이상	225,708(15.6)	143,743(11.4)	369,451
졸업	3,380,192(100.1)	3,574,743(100.0)	6,954,935
국졸(불취학, 中退포함)	373,513(11%)	823,444(23)	1,196,957
중졸(高退 포함)	481,909(14.3)	680,460(19)	1,162,369
고졸(전문대退 포함)	1,482,471(43.9)	1,511,530(42.3)	2,994,001
전문대졸(大退 포함)	236,907(7)	139,798(3.9)	376,705
대졸이상	805,024(23.8)	419,487(11.8)	1,224,511
미상	368	24	392
합계	4,829,217	4,835,203	9,664,420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1995).

교육은 여성이 사회발전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자신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6세 이상 인구중 재학중인 여성을 제외하면 3,574,743명이다. 이 가운데 국졸이하가 23%, 중졸이 19%, 고졸이 42.3%, 전문대졸이 3.9%, 대졸이상인 11.8%로 고졸이상이 2,070,815명으로 5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36.7% (여성개발원(1995),여성통계연보)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이들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에 따라 서울시 발전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남성과는 대졸이상에서 12.1%차이가 나서 고학력일수록 성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6]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학력분포(졸업)

연령	국졸 823,444명	중졸 680,460명	고 학 력			
			고졸 (1,511,530)	전문대졸 (139,798)	대졸 (419,487)	소계 (2,070,815)
20세미만 (%)	60,348 (7.3)	23,534 (3.5)	108,400 (7.2)	983 (0.7)		109,383 (5.3)
20-29 (3.5)	28,896 (3.5)	130,165 (19.1)	638,453 (42.2)	75,072 (53.7)	168,570 (40.2)	882,095 (42.6)
30-39 (11)	90,486 (11)	236,886 (34.8)	452,988 (30)	39,540 (28.3)	145,367 (34.7)	637,895 (30.8)
40-49 (19.1)	157,350 (19.1)	181,993 (26.7)	209,747 (13.9)	15,173 (10.8)	77,705 (18.5)	302,625 (14.6)
50세이상 (59.1)	486,364 (59.1)	107,882 (15.9)	101,942 (6.7)	9,030 (6.5)	27,845 (6.6)	138,817 (6.7)

서울통계연보(1995), 서울특별시

서울시 여성의 학력정도를 연령별로 보면 국졸의 경우 50대 이상(59.1%)에 집중되어 있고, 중졸은 3, 40대(61.5%)에, 고졸 이상은 2, 30대(73.4%)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일수록 고학력 현상이 높고, 대졸의 경우 40대도 1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표 2-6 참조)

결론적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난 서울시 여성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의 수가 많고 6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의 수가 많아 인구

구조의 불균형 상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노인여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더우기 현재의 유년인구가 생산연령층이 되는 시점에서 노년 피부양인구가 증가하여 심각한 노인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2) 혼인상태별 가구분포를 보면 유배우가구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고, 이혼(+0.5%)·새로운 형태의 가구(+2.5%)는 전국평균보다 높아 지금까지 핵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3) 모자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별, 이혼, 미혼모 순서로 발생되고 3, 40대에 집중되어 있다. 모자가정세대수 중 지원을 받는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71.2%)은 전국(85.6%)보다 낮다.

4) 2세대 가구가 전국평균보다 높아 핵가족화에 따른 여성의 양육책임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제 성인여성인구대 아동의존율은 전국보다 약간 낮은(-2.7%)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민간의존도가 전국보다 높아 아동보육에 대한 개인부담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5) 고졸학력 이상의 서울시 여성은 전국36.7%보다 훨씬 높은 57.9%이나 남자보다는 낮다. 연령별학력분포를 보면 국졸의 경우 50대 이상(59.1%)에, 중졸은 3, 40대(61.5%)에, 고졸이상은 2, 30대(73.4%)에 집중되어 젊은 여성일수록 고학력현상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았다.

II. 노동시장 참여특성

[표2-7]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1994)

성 별	전 국		서 울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남	76.4	2.7	78.5	3.1
여	47.9	1.9	48.2	2.2

통계청(1995), 1994 경제활동인구연보

15세 이상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2%로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실업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1994년도 비경제활동인구 2,968,000명중 51.4%인 1,527,000명이 가사종사자이며 이는 전국 평균 38.5%보다 높다. 고학력 여성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전업가사종사자가 1,527,000명이나 되는 것은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서울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8.5%와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표2-8]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 분포(1994)

연령별	전국		서울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15-19세	257,000	3.2	82,000	4.2
20-24세	1,320,000	16.5	432,000	22.3
25-29세	882,000	11.0	268,000	13.8
30-54세	4,292,000	53.6	1,020,000	52.5
55세 이상	1,252,000	15.7	139,000	7.2
계	8,003,000	100.0	1,941,000	100.0

통계청(1995), 1994 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30-54세의 중장년층이 52.5%로 가장 많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20-29세의 취업자 수가 전국보다 많다. 이에 비해 30세이상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 여성의 취업단절 현상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30대 여성의 학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평생노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기혼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5세 이상의 취업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농·어업종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없기 때문이다.(표 2-8 참조)

[표2-9]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1992)

산 업 별	전국		서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농·수·어·임업	1,788,000	26.7	18,000	1.2
광공업	1,345,000	20.1	357,000	24.9
사회간접자본·기타서비스업	3,569,000	53.2	1,060,000	73.9
계	6,702,000	100.0	1,435,000	100.0

한국여성개발원(1995), 1995 여성통계연보

서울시 여성취업자는 73.9%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 도·소매,음식업에 50.9%(540,000명)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비해 20% 높은 것으로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광공업 종사자가 많고 그 가운데 99.7%(356,000명)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이러한 현상은 직업구조(1990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판매·서비스직이 37%(전국:25.5%), 사무직이 26.5%(전국:12.6%), 생산직이 22.2%(전국:20.7%), 전문·관리직이 14%(전국:7.1%), 농림어업직이 0.3%(전국:34.1%)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에 비해 전문·관리직(+6.9%), 사무직(+13.9%), 판매·서비스직(+11.5%)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학력이 높은 것과 유관함을 알 수 있다.(표 2-10 참조)

[표2-10] 서울시(전국)여성의 연령별 직업분포

연령	전 문, 관리직		사 무 직		판 매, 서비스직		농 립, 어업직		생 산 직		소 계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20세미만	3.0	3.0	45.7	29.4	16.8	10.0		5.2	34.5	52.4	(100)	83,260	281,282
20-24	14.1	13.0	46.2	37.2	18.7	16.1		5.0	21.0	28.7	(#)	311,486	767,405
25-29	23.4	20.2	34.7	20.3	24.4	27		16.3	17.5	16.2	(#)	192,555	455,092
30-39	15.5	7.2	13.1	5.6	48.4	39.1	0.4	26.8	22.6	21.3	(#)	248,245	879,222
40-49	9.6	2.9	5.4	1.6	61.7	34.8	0.7	41.3	22.6	19.4	(#)	183,085	780,252
50-59	9.0	1.1	4.0	0.4	63.2	11.9	1.4	68.0	22.4	18.6	(#)	80,630	688,667
60세이상	8.3	1.0	1.9	0.1	59.3	9.8	3.4	84.5	27.1	4.6	(#)	16,628	328,781
전 체	14.0	7.1	26.5	12.6	37	25.5	0.3	34.1	22.2	20.7	(#)	1,115,889	4,180,701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직업분포를 전국여성과 비교하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30대 이후부터 전국보다 높고, 사무직의 경우 20대까지 월등하게 높아지다가 3, 4대에는 그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3, 4대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생산직은 전국에 비해 25세이후부터 50대까지 약간 높다가 60대에는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25-29세와 30대에서 전국평균에 비해 전문, 관리직이나 사무직의 비율이 매우 높고 30대이상에서 판매·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에서는 사무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전문관리직순으로 직업이 분포되었고, 25-29세에서는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전문관리직, 생산직 순으로 나타났다.(전국은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생산직 순) 30대 이상에는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전문관리직, 사무직순으로 나타나서 20대에는 사무직에, 30대이상에는 판매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0 참조) 서울시 여성의 취업단절 현상은 사무직에서 30대에 51.3%가 그만둔 뒤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전문관리직은 30대에 14.6%가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 사무직의 단절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은 25-29세 사이에서 48.5%가 그만두고 30대에는 오히려 1.7배 늘어나고,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30대에 2.6배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1970년 54%에서 1990년 57.5%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자료에 의하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의 재취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희망직종은 서비스직, 사무직으로 사무직의 취업단절현상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서울시 여성의 취업증가율(1975년 대비 1990년 현재)을 보면 15-19세에서 23.8%, 20대에서 8.6%, 30대에서 6%, 40대에서 5.5%, 50대에서 4.6%, 60세이상에서 1.3% 증가를 보이고 있다.(서울시정연구 3권, 1995)

[표2-11]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1992)

종사상 지위	전 국				서 울			
	남	비율	여	비율	남	비율	여	비율
고 용 주	697,000	6	115,000	2	245,000	9	36,000	2
자 영 자	3,492,000	31	1,088,000	16	589,000	21	170,000	12
무급가족종사자	280,000	2	2,278,000	34	27,000	1	295,000	21
상 시 고	6,112,000	54	2,658,000	40	1,744,000	62	798,000	56
(5인이상사업체)	(4,401,000)	(39)	(1,766,000)	(26.3)	(1,345,000)	(48)	(582,000)	(41)
일 고	817,000	7	564,000	8	195,000	7	137,000	9
계	11,398,000	100	6,702,000	100	2,799,000	100	1,435,000	100

한국여성개발원(1995), 1995 여성통계연보, / 노동부(1995),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서울시의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분포를 보면 상시고에 56% 집중되어 있고 무급가족종사자가 21%이다. 전국과 비교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비율은 낮고 상시고와 일고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낮고 상시고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일고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일부 계층에서의 불안정고용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시고 취업자중 5인이상 사업체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남72%,여66.4%)보다 서울시 (남77.1%,여72.9%)가 높고 성별격차도 전국평균에 비해 격차가 적다. 5인이상 사업체근로자중 여성의 비율은 서울시 30.2%로서 전국(28.6%)보다 약간 높다.(표 2-11 참조)

[표2-12] 규모별 성별 근로자 분포

규모 별	전 국				서 울			
	남	비율	여	비율(여/남)	남	비율	여	비율(여/남)
5- 29인	1,196,000	27	507,000	29(43)	411,000	31	195,000	33(47)
30- 99인	1,112,000	25	470,000	26(42)	275,000	20	127,000	22(46)
100-299인	851,000	19	312,000	18(37)	247,000	18	86,000	15(35)
300-999인	652,000	15	253,000	14(39)	253,000	19	97,000	17(38)
1,000인 이상	590,000	14	224,000	13(38)	160,000	12	77,000	13(48)
계	4,401,000	100	1,766,000	100	1,346,000	100	582,000	100

노동부(1995),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참조: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을 특종업종을 제외한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로 한정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체에,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

5인이상 사업체에서 규모에 따른 성별근로자의 분포를 전국과 비교하면 29인이하는 전국보다 높고 30-299인 사업체근로자는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00-999인 사업체근로자는 전국보다 약간 높지만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1,000인이상 규모의 사업체에는 서울시 여성근로자의 13%만이 근무하고 있어 서울시 여성취업자가 상시근로자는 많지만 대단히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규모별 성별차이를 보면 전국에 비해 5-99인 사업체와 1,000인 사업체는 전국보다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2 참조)

결론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47.9%보다 높은 48.2%이고 실업율은 전국 1.9%보다 높은 2.2%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성실업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2) 통계상으로 서울시는 전국 평균치보다 여성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보이지만, 그 주된 요인은 29세 미만의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은 전국 69.2%보다 훨씬 낮은 59.8%이어서 취업단절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무직은 30대에 51.3%가 그만두고, 생산직에서는 25-29세 사이에 48.5%가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에 생산직에서는 1.7배 취업이 증대되고 판매서비스직에서는 무려 2.6배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울시의 산업별 여성취업자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73.9%로 전국 53.3%보다 훨씬 높고 제조업종사자(24.8%)도 전국 평균 20%보다 높다.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직종은 전문관리직(+6.9%), 사무직(+13.9%), 판매서비스직(+11.5%)으로 나타났다.

4) 기혼여성의 취업율은 증가추세로 나타나는데, 그 주요인은 판매·서비스직, 생산직의 재취업에 기인한다.

5) 여성취업구조를 보면 상시고(56%)가 전국(40%)보다 높지만 일고(9%)도 전국(8%)보다 높아 일부 계층에서의 불안정고용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체의 여성근로자수는 전국보다 많지만(+14.7%), 20-29세 연령층의 취업단절이 전국보다 높아 사회보험의 수급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6) 서울시의 비경제활동참가자중 가사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 육아기를 지나 재취업하기 시작하는 기혼여성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직, 사무직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지만 사무직의 취업단절 현상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관련사업 ('95,'96)

서울시에서 여성관련사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는 가정복지국이며, 그외에 교육청과 보건사회국이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가정복지국내 여성복지과 사업이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이 있는 보육사업, 학교급식 사업도 포함시켰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들이 여성에게 대부분 맡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I. 사업내용

1.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1)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서울여성위원회 설치³⁾

- 기능: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 개발
여성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조언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의 추진 지원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 교류
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자문
- 구성: 30명-당연직3명(서울시행정1부시장, 여성정책보좌관, 가정복지국장)
위촉직27명

나. 여성발전기금 조성(여성발전기금조례: '96. 5. 20 공포)

- 60억원('96-10억, '97-20억, '98-30억)
- 기금운영: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연수 등

다. 영세 여성자영업자 사업기반 조성

- 중소 여성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할당제 지원

3) 가~마항까지는 '96년 신설사업임.

라. 여성정책모니터제 운영

- 목적: 시직원들의 idea발굴 및 여성정책 이해증진 도모
- 내용: 사회참여 촉진방안 및 남녀불평등 사례 등

마.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시설비율 조정

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 21세기 여성발언대와 나의 주장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참신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 '95 나의 주장 발표회(2.28)

주관: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발표: 28명(참석 500명)

주제: 내가 생각하는세계화/시상: 표창11명(시상금 130만원)

→ 21C 여성발언대

[표3-1. 21C 여성발언대 관련내용]

주 관 단 체	일 시	장 소	주 제
주부교실연합회	2.7	여의도의원회관	쓰레기종량제 정착
재향군인회 부녀부	6.21	재향군인회강당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할
대한어머니회 시지회	7.20	세종문화회관	이것이 과연 선진국인가
적십자봉사회서울지회	9.27	적십자서울지사	21C 자원봉사자의 역할
주부클럽연합회시지회	10.9	상공회의소강당	아파트구조변경 원상복구 어떻게 하나

- 알뜰주부 재활용 및 상설전시관 운영/-중고물품정보 안내센터 운영
- 여성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9개소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
- 주부환경봉사단 지원으로 환경보전, 물자절약, 재활용 시민캠페인 전개 (553개 봉사단 9,445명)
- 여성조직, 지도자를 육성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보장('96. 4 - 9.5%, 2005년까지 30% 확대)
- 4) '95: 차별신고센터 운영: 신고상담, 시정권고, 고발 등 자위활동 전개

2) 평 가

서울시 여성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입안된 점이다. 처음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

4) '95년만의 사업계획임.

향조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시정운영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서울 여성위원회는 사회참여분과위원회, 여성복지분과위원회, 남녀평등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중이다. 96년 2월 22일 발족하여 5월말까지 3회 전체모임과 분과별 모임을 가져 여러가지 건의와 활동계획을 작성하였다. 건의사항으로는 ①서울시 여성채용목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96:10%, '97:15%, '98:20% 단계목표 설정 ②서울시 통계자료에 남녀구분 및 연령별 구분 작성 ③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남성참가자 확대 ④서울시 운영 전산망에 상담방 개설 ⑤서울시 공기업에서의 여성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있다. 활동계획으로는 ①여성관련 시설지도 및 안내서 제작 ②주요도시 여성복지사업 비교연구 및 여성복지 Agenda 21 작성 ③서울여성백서 발간 ④남녀평등세미나 개최 등을 설정하고, 입양아문제와 직종개발은 연구·기획중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서울시 여성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주의가 뿌리깊이 사회 구석구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정복지에 앞서 여성복지를 주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여성복지'가 '가정복지'에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가정복지는 성별 역할 분업과 여성의 희생·봉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여성을 하나의 독립체로서 보는 시각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95년까지의 사업내용은 집안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주어진 역할을 사회로 연장시킨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96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자아실현 관점에서 실현되기보다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국한되어 온 생활과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워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국가책임의 최소화, 가족부양책임의 극대화 따라 여성에게 그 역할이 부담지워져 있어서 여성과 아동의 희생이 큰 것이 오늘의 가족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가져야 할 여성정책의 핵심적 가치관은 여성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여성의 모성기능을 인정하되 이를 이유로 여성을 자녀양육자이며 가사전담자로 역할규정한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은 1)고용확대 2)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3)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서울시 여성의 고용확대 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보다 학력이 높은 여성인력을 서울시 발전에 참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서울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운동을 민간과 함께 대대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정보 및 알선센터 운영, 가족이기주의에 머물 우려가 있는 '가정주부'를 '사회주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평균에 비해 기혼여성취업자 비율이 적고 취업단절 현상이 높은 서울시로서는 장애요인이 되는 가사노동과 육아부담,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 제도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높이고, 산하 각종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할 것이다.

'96. 4월까지 39종의 법령위원회 863명중 여성이 69명(8%), 20종의 조례위원회 559명중 여성이 35명(6.3%), 5종의 훈령·규칙위원회 110명중 여성이 2명(1.8%), 기타 14종의 방침위원회 391명중 여성이 76명(19.4%)으로 총1,923명중 여성이 182명(9.5%)이다.

이는 94년도 여성참여율 6.7%(총 1,437명중 여성이 96명)보다 높은 것으로 여성참여 확대 노력의 결실이라 보여지지만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이상 확대하고, 매년 그 달성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사회교육, 자원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각 영역의 여성리스트를 작성하는 한편, 지역여성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집회장소를 제공하여 자치행정에 참가를 촉진함으로써 여성들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1) 사회참여로서 봉사의 의의와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시키는 자원봉사원 교육 실시 2) 최소한의 봉사료 지급과 활동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봉사대상기관의 민간부문 확대와 남성참여 촉진 4) 민주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 5) 복지분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사이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시간저축제도'를 도입하여 평소 자신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저축하여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시간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시간저축제도'는 상부상조활동을 통해 여성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봉사의 제도적 장치는 자칫 여성인력을 저급화할 우려가 있고, 여성취업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95년 계획으로 설정된 차별신고센터 운영 등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96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능력 개발

1) 추진실적 및 계획

가. 부녀복지관 확충

- 서부부녀복지관: 양천구 신월동 95년 착공, 97년 완공
- 동부부녀복지관: 성동, 강동, 송파구내 97년 부지매입, 99년 완공

나. 여성공무원 국외훈련계획

- 훈련국: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여성국/ 대상: 매년 중견 여성공무원 1명
기간: 1년 - 6개월

다. 부녀복지관 운영내실화

- 기본 기술교육: 6,100명(정보처리, 미용, 광고디자인 등 15과목)
- 생활문화교육: 5,300명(외국어회화, 컴퓨터, 자동차정비 등 23과목)
- 교양강좌: 13,100명(자녀교육, 가정의학, 생활법률 등)
- 지역복지사업: 상담, 취업알선, 자원봉사, 보육실, 도서실 운영

라. 자치구 여성교육

- 여성교양대학: 24개 자치구 10,000명-취미, 교양강좌
- 부녀교실: 29개소 18,000명-부업, 여가선용에 활용가능한 기초기술
- 학교어머니교실: 858개교(초등511, 중347)교양강좌, 알뜰장 개설

2) 평 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기능교육과 교양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기술교육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능력개발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성역할을 온존, 유지하는 선상에서의 여가활동에 우선순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교육 사업도 종래의 여성적인 일이거나 부업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발과 함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교육도 실시하여 여성인력의

고급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단절 극복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인다.

부녀복지관의 교양강좌와 자치구의 여성교양대학 모두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는 무관한 취미강좌나 가사일에 도움을 주는 교양강좌에 그치고 있어 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시대에 앞서가는 내용을 여성에게 제공하기 보다 과거내용을 답습하는 서비스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96년 18억원 지원의 시 직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로부녀복지관 사업을 보면 서울시 여성복지사업의 문제점이 한눈에 드러난다. 사업집행의 비효율성과 구태의 연합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심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제 효력을 가지는 지를 감독하는 책임이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 있는데 노동행정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일하는 여성의 복지차원에서, 여성의 고용요구 증진차원에서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기혼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3. 요보호여성 지원강화

1) 추진실적 및 계획

가.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 모자가정 중 보호대상 7,897세대를 대상으로 조기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실시

- 시 건립 영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중·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지원: 4,520명 22억 9,100만원
- 6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1,018명 1억 4,900만원
- 생업자금지원: 60세대(세대당 천만원이내 용자)

-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무주택 모자가정의 주거공간 제공 (7개소 164세대) 입소자에게는 생계비,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나. 부랑부녀자 선도보호: 2개소 1,200명

- 부랑부녀자는 일시보호와 장기보호로 구분 수용 보호

- 일시보호: 시립부녀보호소 200명

(연고자 찾아주기, 관련시설정보, 보건위생관리, 상담)

- 장기보호: 시립영보자애원 1,000명

(정신박약, 병약자 건강회복, 자활의지육성, 연고자 찾아주기)

다. 성폭력피해 여성보호

- 성폭력상담소를 97년까지 4개소, 일시보호시설 98년까지 4개소

- 성폭력상담소 중심 피해여성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상담, 교육사업 추진

라. 여성문제 상담체계 확충, 정비

- 여성복지상담소 14개소 → 25개소(자치구별). 교통이 편리한 구청, 구민회관, 터미널, 역 위주로 설치하고 상담원 41명 고정배치

마. 윤락여성 선도보호

- 윤락여성, 미혼모, 저소득층 여성보호를 위한 직업보도시설 운영 (5개소 210명)

- 윤락집결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선도 및 집중관리

바. 부녀보호소, 이동상담소 신축이전: 강남구 수서동산. 96착공, 98준공

사.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95 실적: 일시금 5백만원, 월생활지원금 26명 25만원)

2) 평 가

우리나라 부녀복지역사는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수용보호(모자원)와 윤락여성의 선도 및 기술보도(자매원)에 역점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산업화로 인한 가출여성과 근로여성문제에 중점을,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 여성문제에 역점이 주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미혼모문제와 윤락여성의 보호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에서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갱생의 능력을 길러주고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부녀직업보도소·부녀상담소 설치와 일반여성의 복지로 일부 확대하였다. 이와같이 취약계층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요보호여성 대상의 사업영역은 문제의 초점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부녀상담사업과 서비스대상별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보호여성은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탈선행동을 하여 특수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특별한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로 간주된다.

이들 여성은 이미 문제가 발생되어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보호정책은 치료적이고 사후대책적인 서비스 성격을 갖는다.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차원의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지방정부에 위임되지만(기관위임),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고유책임으로 위임됨으로써(단체위임) 지방정부가 지방실정에 맞게 다양한 민간공급원들과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복지선진국들의 경향이다. 외국의 복지선진국들에서는 70년대부터 사회변동에 따르는 국민들의 복지요구가 변화되고 보편화됨으로써 사회보장의 제5의 영역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도화시켰다. (김용일, 1995)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의 흐름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인 급여로부터 모든 여성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로 하는 보편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빈곤과 성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여성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단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일반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0),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우리사회에서도 최근에 합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의 여성에 관한 복지 전반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요보호여성에 대해서는 급여수준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최저생계보장과 자립의 길을 열어 주고 일반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활동의 장은 가정'이라는 인식을 바꾸어 유휴여성 인력을 사회에 기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변화와 함께 사업내용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①

현재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될 대상의 숫자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보호대상으로서의 윤락여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대상자의 수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온 대상을 대상인양 보고하고 발표하는 실정이다. (이혜경, 1995)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복지수요를 정확

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측정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보호대상자를 예산규모에 맞추어 온 행정관행에서 비롯된다. 이에 여성복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한 뒤 이를 기초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윤락여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서비스의 특수성, 다양성, 지속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단속의 실효성 확보, 포주·업주·조직폭력배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고액인 남성에 대한 성교육과 미성년자 매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

현재 저소득층 모자가족을 위한 모자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일정기간 모자가족에게 주택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행의 모자서비스는 수혜대상자의 제한, 시설의 절대부족, 서비스 수준미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나마 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격요건과 입소절차의 까다로움, 홍보미비로 모자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은 모자가족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확한 숫자 파악과 함께 모자복지시설을 늘리고, 일정소득 이하의 모든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미혼모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혼모 자신은 물론 태어나 신생아의 건강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은 매춘 등 일탈적인 생활로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혼모 일시보호시설,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원활하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4]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다. 심리상담, 의료적 서비스, 법률적 서비스 외에도 이들 기관과의 연계서비스,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근친상간 피해청소년들을 위하여 성인이 되기까지의 보호와 학비, 생활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으로 뿌리깊은 성고정관념의 탈피를 위한 의식교육과 홍보가 중요한데 이 일은 거의 방치된 상태이다.

[5]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활동과 복지 서비스 단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먼저 복지욕구의 종류와 정도에 대응하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시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산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복지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지역적으로 편재될 가능성이 있다. 여성복지 지도를 작성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새로운 가족형태의 변화와 여성을 한 개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혜택이 세대(부부)단위 중심에서 개인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994년 통계(제35회 서울통계연보, 1995)에 의하면 15세 이상 여성인구 4,032,956명중 사별 390,957명·이혼 47,338명·미혼 1,262,478명으로 나타나 남성 가부장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혜택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그 중요도에 비해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가정폭력, 외국인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4. 보육사업 확대

1) 추진실적 및 계획

가. 보육시설 확충 - 3개년 총 870개소

[표3-2] 보육시설 확충계획

구 분	'95	'96	'97	'98	
시설수	신설(개소)	401	370	370	130
	누계(개소)	2,100	2,470	2,840	2,870
보육대상아동(천명)	84	87	90	91	
보육아동(천명)	70	80	90	91	
보육율(%)	83.3	92	100	100	

* 95년부터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수립 추진으로 97년까지 보육대상아동 전원 보육기반 조성

'96 신규시설확충:370개소(구립30, 민간 340)예산 31억(국비16억 시비15억)
 시설 개·보수:70개소(구립30, 5.2억<국비2.7억 시비2.5억>/민간40,12억<시비>)

나. 민간보육시설지원 증대

- 교재교구비 지원:구립과 동일
- 학교·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지원
 (설치비:개소당 2,500-5,000만원, 운영비:소요보육교사1/2 수준. 최대 2명)
-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용자지원
 (건축비:평당 300만원 기준 최고9억원.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설치비:평당 200만원기준 최고6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보강비: 평당 100만원기준 최고6천만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자 년 8%, 담보제공 원칙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설치비-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 운영비:고용보험기금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보육시설 설치 규제완화
 *용도변경 생략:300㎡ 미만의 보육시설 설치시
 *놀이방 정원 확대:보육아동 15명->20명

다. 운영내실화

- 국비지원사업(국비20% 시비40% 구비40%)
 *구립 및 법인시설의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50%수준)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전액지원
 *일정 소득미만자 보육료 50%지원
- 시비가산사업(시비50% 구비50%)
 *보육료 부담 경감:두자녀 동시입소시 한자녀 보육료 50%경감
 *보육교사 처우개선:8시간근무체제 확립, 보육교사 중식 제공
-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
- 교재교구 개발 평가회 개최(전보육시설 95.11월)
-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일반교육800명, 특기교육400명

'95:위탁시설 운영평가 실시

2) 평가

97년도까지 보육율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 민간의존도가 심한 서울시 아동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를 시장기능에 맡겨 민간의 보육시장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95년도 확충 401개 시설중 27개(6.7%)만이 구립이며, '96·'97년 확충 370개소중 25개(6.8%)만이 구립시설 계획을 세워두고 있을 뿐이다.

보육아동의 60%이상을 돌보게 될 민간, 가정보육에 대해 95년 처음으로 교재교구비를 책정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는 하나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보육의 위치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서 보육서비스는 사적 서비스가 아닌 준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주장에 위배되고 있다. (최현숙,1995)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대부분 적자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어려움은 더한 상태이다. 안정된 보육사업을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 의존적인 보육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과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보육료 부담에서도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부담'(국가, 지방정부, 부모)원칙으로 바뀌어야 하고, 법정 저소득층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면제해주는 sliding scale(소득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징수방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만하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사업은 사회적인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보육사업에 대한 각 집단들의 문제인식 정도와 해결방안에 큰 5)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가 핵심내용

5) 서울시 자체가 95년도에 진단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보면 1)보육시설의 절대부족과 지역편재의 문제를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극복 2)구립시설 사유화경향으로 말미암아 운영체제를 개선, 구직영제를 도입하여 공공성 확보 3)보육시설이 영아를 기피하고 취업모 아동의 입소를 기피 4)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5)보육료 부담과중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한 미흡을 일시보육 허용, 보육료 감면을 통해 해결 6)위탁운영자에 대한 평가실시로 위탁계약의 연장 7)정년제 실시 등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측에서는 해결방안으로 1)현재 보육정책 결정의 심의기관에 불과한 보육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선정,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의 선정, 설계·건축·보육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2)유명무실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지도,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이용의 알선,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교구의 개발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에 한정된 문제라기 보다 시설위주로 이루어진 서울시 여성복지 정책과도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에 대한 6)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체가 선정되고 이후에는 평가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의 각각의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설의 효율화와 보조금 지급 합리화

- ① 운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 ②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일률지급 (복지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지급하거나 1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에서 경제력에 입각한 보호단가 차등방식으로 변화시켜 사회균등성과 합리성을 꾀한다.
- ③ 복지시설 종류별, 프로그램별, 사업별 예산지원 수준의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한다.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이창미,1995)고 제시하였다. 서울시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서울시 개선안이 전 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접근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정도도 진단방법의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위탁선정이 선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민간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2)보육사업의 관점은 아동에게 맞추어져야 하는데 운영체에 있었다. 운영체나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육사업에 대한 관점은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직영 공공부문시설과 위탁 민간부문시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 공공부문 장점
 - 1. 운영의 공공성 확보로 빈곤 감소, 상대적 불평등의 완화 및 사회통합으로 신뢰성 제고
 - 2. 종사자의 신분보장으로 안정된 시설운영
- 공공부문 단점
 - 1. 운영의 경직성으로 서비스 확일화와 질적 저하, 비용 효율성의 감소
 - 2.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
 - 3. 기존 위탁 운영자 반발
- 민간위탁 장점
 - 1. 운영의 탄력성으로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비용 절감
 - 2. 책임경영으로 안전사고 대비, 종사자 임명 용이
- 민간위탁 단점
 - 1. 사유화경향으로 종사자 신분보장 불충분, 가족간 운영승계, 위탁부담금을 이유로 연고권 주장
 - 2. 수익성치중, 운영비리 반복 발생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비리의 근절

- ① 시설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설내의 인권실태,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감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그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 ③ 시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운영에 관한 정보와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결과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시설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 ①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근무시간, 지방직 공무원(사회복지전문요원)에 준하는 임금수준, 보수교육과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의 민주화, 사회화

- ① 이사회구성에 친인척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직원대표와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복지관련단체의 참여를 일정수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회의의 내용 및 시설재정을 공개해서 시설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② 시설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해야 한다. 시설장의 경우 타 직종의 겸업을 금지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 시설의 전문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장의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시설장의 정년퇴임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의 사회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과 활력있는 시설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시설의 모델 개발 및 운영주체의 다변화

- ①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 ② 운영주체도 다변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자로서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한다. 운영주체의 다변화는 6개부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다. 1(공공부문) 2(민간부문:기업과 시민) 3(공공과 기업의 결합) 4(공공과 시민결합) 5(기업과 시민결합) 6(공공, 기업, 시민 연합)

5. 학교급식 운영지원

1) 추진실적 및 계획

가. 기본방침

- 바른식생활 습관 및 식사에절 지도
- 급식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

나. 급식학교 계획

[표3-3] 학교급식 계획

전체 학교수	급식 학교수	급식실시 비율	'95 신설			'96 신설	
			계	공립	사립	학교수	비율(%)
512	377	73.6%	108	103	5	135	26.4

다. 급식학교 지원

- 급식학교 시설, 설치비 지원(공립)109억 4,800만원
- 공립급식학교 운영비 지원:351교, 116억 6,700만원
- 특수학교 급식 운영비 지원:17교, 6억 2,000만원
- 불우학생 중식지원
 - 초등학교:2,174명 4억 9,100만원(국고) 중학교:1,104명 3억 3,300만원(시비)

라. 향후 추진계획

- 96년도까지 전체 초등학교 급식실시:신설 135교(270억원 소요)
- 공립 급식학교 운영비 지속적인 지원
- 중·고등학교 급식 단계적 실시방안 검토

2) 평 가

95년 12월 현재 급식학교는 377개교이고 나머지 135개교는 96년도에 한 학교 당 2억원을 지원하여 완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계획안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많은 여성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원마련의 책임주체와 급식시설의 비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다. 그러나 급식의 질 개선과 중학교 급식 실시를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중·고교급식의 효율적인 방안마련과 함께 학교급식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 에 산

[표3-4] 사회복지비 연도별 추이

항목/년도	'94	'95
계	3조4287억1천8백만원	3조8천억원
1.사회복지비	3723억8천9백(10.9%)	4440억5천6백(11.7%)
1-1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1841억7천3백(5.4%)	2226억9천4백(5.9%)
1-2사회보장 #가정복지	1882억1천6백(5.5%) 시예산의 (2.2%)	2223억6천2백(5.8%) 시예산의(2.6%)

서울시 95년도 예산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7%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보장이 여기에 속한다. 96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1.6%감축·편성했지만 교통, 환경,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중점 사업대상으로 삼을 것을 밝힌 바 있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민선시장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순수복지사업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순수 복지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1%정도 올랐지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인상률보다는 훨씬 적다. 사회복지비내에서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보건환경비, 공원녹지비 그리고 청소사업비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러나 복지수요기초조사에 21억원을 투자하여 97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복지사업비 중 사회보장분야의 총예산은 95년도에 2223억 6천2백만원이다. 이를 서울시민 10,798,7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년 2만 6백원으로 아주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94년도 약 1만6,400원보다 약간 인상되었을 뿐이다. 전국은 30조 3,404억 6,300만원중 복지사업비가 2조 2,060억 2,8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45,575,215명) 1인당 4만 8,4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양시의 경우 전체예산 2,267억 8,418만 7천원중 복지사업비는 9.7%인 233억 7,355만 7천원이다. 이를 안양시민 595,8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39,228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울의 물가율이 타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들의 사회복지 체감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국방비 부담이 없는 서울시로서는 앞으로 복지사업비에 대폭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사업비에서 가정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한다. 가정복지비는 다시 가정(노인, 아동 포함), 청소년, 여성복지로 나뉜다. 여성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0.3%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삶의 질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3-5] 서울시 여성복지 세출 예산액(1995, 1996)

사업명	'95	'96	증감 및 비고
요보호여성지원	77억1,887만원 (56.5%)	85억8,386만9천원 (53.4%)	+8억6,499만9천(+11.2%)
· 저소득모자가정지원	25억4,068만8천	25억4,068만8천	
· 모자보호시설운영	5억 165만6천	6억1,640만2천	+1억1,474만6천(+22.9%)
· 부랑부녀자보호소운영	28억5,436만3천	31억2,493만7천	+2억7,057만4천(+9.5%)
· 선도보호시설, 성폭력피해 시설운영지원	8억4,772만5천	7억9,374만8천	- 5,397만7천(-6.4%)
· 시설개· 보수비, 기능보강비	9억 863만8천	14억4,229만4천	+5억3,365만6천(+58.7%)
·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6,580만	6,580만	국고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58억7,101만9천 (43%)	63억9,626만3천 (39.8%)	+5억2,524만4천(+8.9%)
· 구로부녀복지관 운영	16억7,977만5천	18억 25만6천	+1억2,048만1천(+7.2%)
· 마포 "	12억7,360만8천	12억6,127만5천	- 1,233만3천(-1%)
· 노원 "	11억1,202만4천	12억2,268만3천	+1억1,065만9천(+10%)
· 부녀복지관 확충비	10억	11억9,600만	+1억9,600만 (+19.6%)
· 자치구여성교육: 여성교양대학	9,125만	1억5,573만9천	자치구 예산
· " 부녀교실	6억9,427만7천	7억4,284만	
· " 학교어머니교실	2,008만5천	1,747만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7,216만2천 (0.5%)	10억9,573만7천 (6.8%)	+10억2,357만5천(+151.8%)
· 여성발전기금조성	0	10억	+10억(신설)
· 여성위원회 운영비	0	2,120만	+2,120만(신설)
· 21C 여성발언대	3,000만	2,990만	-10만(-0.3%)
· 나의 주장 발표회	400만	491만	+91만(+22.8%)
· 알뜰주부재활용전시관 운영	2,107만4천	1,990만5천	-116만9천(-5.5%)
· 여성자원봉사자 운영비	0	557만	+557만
· 중고물품교환센터 운영	1,708만8천	1,425만2천	-2,836만(-16.6%)
· 소계(전체)	136억6,205만1천	160억7,586만9천	+24억1,381만8천(+17.7%)
· " (시비)	82억9,242만2천	100억3,535만3천	+17억4,293만1천(+21%)

96년도 여성복지비는 160억 7,586만 9천원으로 95년도 136억 6,205만 1천원에 비해 17.7%가 늘어났다.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10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증가액은 2,357만 5천원으로 13% 증가했다. 요보호여성 지원 예산 증가액은 8억 6,499만 9천원으로 11.2% 증가했다. 이중 시설 부대비용액에 5억 3,365만 6천원이 산정되어 피부에 와닿는 복지증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여성의 능력개발 예산증가액은 5억 2,524만 4천원으로 8.9% 증가했지만 이것 역시 주로 부녀복지관 운영비로 산정되었을 뿐이다. 순수한 의미의 능력개발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96년도 여성복지비 내역을 보면 요보호여성지원이 53.4%, 여성의 능력개발비가 39.8%,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비가 6.8%이다.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비가 가장 낮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복지비 가운데 시설 운영비와 부대비용에 114억 5,759만 5천원이 편성되어 총액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복지가 시설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24억 1,381만 8천원은 서울시 여성들이 여성정책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절대액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늘어난 사업비는 기금 조성·시설 운영비·시설 부대비용으로 대부분 투입되어 일반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꾀하지 못했다.

최근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GDP 대비 5%의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정도에 따른 최소한의 요구로 5년 동안 매년 40% 정도의 증액을 해야만 이룩될 수 있다고 한다. 여성복지비도 40% 이상 증액함으로써 서울시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여성관련 조직체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 개선과 가족부양 의무를 덜어주는 일이다. 현재 여성들의 생활 조건으로볼때, 보아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입장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정책과 관련된 가족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가족관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회변화에 따른 양성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개념과 가족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복지정책의 방향은 개인의 행복이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둘 것인가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정책에는 각 입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정책과 제도적 모델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내포한 여성정책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정책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전담부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여성관련 사업은 크게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사업, 여성복지로 대별되지만 노인·생활보호대상자·장애자 가운데 여성들의 특수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아직까지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족부양(노인·청소년·아동)역할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로는 총괄적 성격의 여성정책보좌관-시정개발담당관-여성정책계가 있으며, 집행기구로 가정복지국-여성복지과-여성행정계, 교육개발계, 부녀보호계를 두고 있다. 그 밑에 직영사업소 4개소(구로, 마포, 노원부녀복지관과 부녀보호소)위탁사업소 1개소(시립영보자애원)여성복지시설 30개소(여성복지상담소<14>성폭력피해일시보호<1>성폭력피해상담소<3>모자원<7>선도보호시설<5>보육시설 395개소(구립)를 관장하고 있다. 그밖에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취약계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관련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가정복지국은 내무부의 지방행정국 행정과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복지국과 그 산하 여성복지과의 주요업무는 가족정책 내지 요보호여성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정책의 집행에 있기보다는 가족보호정책에 설치목적의 두고 있다. 대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성정책은 지방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 여성정책 역시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 영향하에 있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성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조치라고 본다면, 현재 가정복지국과 여성복지과의 기능과 역할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그 중심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 여성관련사업 조직의 효율화와 새로운 조직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시대변화에 따른 서울시 여성정책을 강력히 펼쳐나가기 위해 각 행정부서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집행부서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평등지원 정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노인 가운데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요하는 계층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업무가 보건사회국 사회과와 가정복지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특수문제가 고려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는 여성특수문제 해결뿐 아니라 복지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도 조직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까지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족부양(노인·청소년·아동)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업무로 노인·청소년·아동의 일반복지문제와 함께 여성의 특수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금년도에 신설된 정책보좌관제는 시장의 참모기능을 수행하여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 여성정책은 일반 다른 정책과 달리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연결성이 깊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과나 국의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행정영역에 대하여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정 전체의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시장의 업무감독하에 있으므로 신속한 결정이 보장된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폭넓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 정무장관(제2)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전담부서와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 관련성

여성문제를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 총체적 의미로 보는 여성정책 개념은 1980년대 여성개발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정무장관(제2)실 등 국가차원의 여성정책기구설치와 함께 형성되었다.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심의를 그 주 임무로 한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정무장관(제2)실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부서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사회복지정책실 내에 부녀복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여성문제를 총괄하는 가정복지심의관은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여성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불우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을 관장하는 부녀복지과와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과, 그리고 노인복지과를 관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여성취업확대 및 직업훈련, 여성근로자 복지, 직장내 성폭력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부는 여성교육의 확대,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 성역할 고정관념시정을 위한 가정·기술과목 통합,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여학생진로지도 교육, 유아교육, 교육행정직에 여성진출 확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권영자, 1995)

현재 여성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의 행정기구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부녀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시·도의 가정복지국(부녀복지과) 및 시·군·구의 가정복지과(부녀복지계), 여성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시·도의 국민운동지원과(시·군·구·계), 시·군·구의 근로여성과 관련하여 각도의 노동청, 농촌여성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소, 청소년과 관련하여 시·도의 사회과(시·군·구·계) 그리고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각 시의 교육청이 있다.(여성개발원, 1991)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의 부녀복지정책은 요보호여성 중심의 구빈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가부장적 가족개념과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전제한 측면이 강한 반면, 정무장관(제2)실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지향적인 민주적 사회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해서 여성정책이 상반될 수 있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정무장

관(제2)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을 맺는 제4조정관의 역할이 있지만 지방순회의 여성정책설명회를 제외하고는 협조체제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없어 정무장관(제2)실이 입안한 여성정책이 지방행정에서는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무장관(제2)실이 추구하는 여성정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실제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지방행정기구로 내려오면 그 의미가 달라져 실제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무급의 비주체적인 자원봉사자로 여성을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정무장관(제2)실,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여성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수립되어,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이 수립·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수립시 지방행정실무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방 행정조직이 없는 정무장관(제2)실로서는 민주적인 여성정책 수립의 기본조건이고, 지역의 특수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일선 행정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일선행정조직에 여성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여성정책방법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인 가족질서가 관행뿐 아니라 행정담당자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가족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성은 어머니와 아내로서 역할수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속에 문제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시도될 경우에도 그것은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는 여성들을 기존의 남녀차별적인 가치관에 순응시키고 그것에 어긋나거나 혹은 불응하게 될 경우 문제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부당하게 차별받는 여성의 입장이 고려되고 여성의 의식을 제고하면서 성차별적 현실을 시정해나가는 여성정책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무장관(제2)실 주요 여성정책('95·'96)

중점내용 /연도	'95년도 실적	'96년도 계획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별 편견개선 소위원회 설치 -대중매체상의 성차별내용 개선 광복50주년 [여성주간]설정 지방순회 여성정책 설명회 평등한 부부상 확산 -지역별 토론회,사례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교육 강화 -여성사회교육기관 교육과정 재편성 □ 대중매체등한 성차별의식 개선 -지표개발,제작지침서,공익프로지원 평등,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법적,제도적대책,평등한 부부상 확산 가사노동가치의 제도화방안 연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방안 확정, 추진 제1회[고용평등의 달]추진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확대 보육시설 확대 및 내실화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남녀고용평등 추진 -96년남녀고용평등의 달행사 주제:"채용에 있어서의 차별개선" -공단지역 사용자,근로자 정책간담회 여성 경제활동참여확대 위한 기반 □ 모성보호비용 사회적 분담화방안 □ 보육시설의 민간참여 유도 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체제의 정착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방안 연구 □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여성우대 조치 기업 지원책 강구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개선 -직업훈련 확충 대책 수립 -직업의식확립위한 자료보급,교육강화 -첨단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지원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 확대/ 국가사회 발전에 여성역량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내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확대(2005년 까지 30%) 고위공직에 여성의 참여확대 -5.7급행정직채용시 여성고용목표제 도입(2000년까지 20%) 특수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존중운동 추진 -'생활개혁', '삶의 질의 세계화'선상에서 실천과제 선정,법·제도 개선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확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관리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추진 ('96년 10%)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협조 및 지원 강화
여성의 국제협력과 교류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의 참가 여성관련 국제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 선도분야 활용 위한 기반구축 여성지위향상 위한 국제사회에 참여 -여성관련 유엔활동 증진 -아태지역 여성개발 협력사업 강화
여성정책 추진기능 강화/여성권의향상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 혼인에 관한 특별법 제정('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준비 여성분야 세계화과제 추진 □ 여성정보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시·도여성정책 추진기구와의 협력, 지방순회 여성정책설명회
저혜택취약계층지원		

□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10대과제중 '학교급식의 확대'를 제외한 9대 과제 표시부분이다

서울특별시 의회활동(속기록을 중심으로)

1. 서울특별시 의회 활동 현황

1995년 6월 27일 전국 4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서울특별시에서는 133개 지역선거구에서 133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로 14명이 선출되어 총 147명으로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제78회 임시회('95. 7. 12)부터 제13회 정기회까지 전체 5회 회의를 7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회의 출석율은 95.4%로 의욕적인 출발을 한 셈이다.

본회의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5-1. 제4대 본회의 운영 개요]

회 의	회 기	본 회 의			위원회
		회의수	시정질문의원 (질문수)	출석율	
제78회 임시회	'95. 7. 12- 7. 15(4일)	2	13(99)	100	2
제79회 "	8. 16- 8. 25(10일)	3	12(92)	95	7
제80회 "	9. 18- 9. 28(11일)	4	14(118)	95	7
제81회 "	10. 16-10. 30(15일)	5	17(108)	93	10
제13회 정기회	11. 20-12. 27(38일)	7	20(138)	94	31

서울특별시 의회(1995), 제13회정기회 경과보고서.

[표5-2. 제4대 '95년도 본회의 안건처리 현황]

회의	계	예·결산안	조례안	동의·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청취	기타
제78회 임시회	9								9
제79회 "	39		8	2	3	9			17
제80회 "	25		6	1	2	3		9	4
제81회 "	37	2	12	3	1	2		10	7
제13회 정기회	105	4	31	9	4	2	4	44	7
소 계	215	6	57	15	10	16	4	63	44

서울특별시 의회(1995), 제13회정기회 경과보고서.

5회 회의에 215건의 안전을 처리하여 회기별로 평균 44건을 처리하였다. 95년도에 조례안을 57건 처리하였지만 아쉽게도 여성관련 조례는 없었다.

서울시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7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95년 6월 27일 선거이후 95년 12월까지 각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와 다룬 안전 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3] 제4대 상임위원회별 활동내용

구분 위원회	회의개최횟수				출석위원수				현장 시찰	안건	
	임시회	정기회	사무 감사	소계	임시회	정기회	사무 감사	소계 (출석률)		임시회	정기회
운영	9	4	1	14	119	45	12	176(78.6%)		12	8
내무	11	8	8	27	173	116	117	406(88.5)	2	8	19
재무경제	11	5	7	23	148	71	87	306(83.2)	6	15	22
생활환경	9	6	7	22	136	71	95	302(85.8)	7	11	21
보건사회	15	4	8	27	204	55	99	358(82.9)	6	13	33
수자원관리	7	5	8	20	102	60	100	262(81.9)	10	18	26
문화교육	11	9	8	28	153	119	112	384(85.7)	7	16	30
건설	7	4	8	19	103	51	109	263(86.5)	8	13	27
도시정비	11	6	7	24	174	91	105	370(90.7)	3	38	95
교통	10	7	6	23	147	104	90	341(92.7)	6	17	28
소계	101	58	68	227	1,459	783	926	3,168(86%)	55	161	309

서울특별시 의회(1995), 경과보고서.

상임위원회는 임시, 정기회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5년도에 470건의 안전을 처리하였다. 그밖에 현장시찰을 55회 실시하였으나 속기사 부족으로 속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다. 평균 출석율은 86%이고 출석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원회는 교통위원회,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나타났다. 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상임위원회는 문화교육위원회이고, 안전을 가장 많이 다룬 위원회는 도시정비위원회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는 예결특위 6회, 지방자치발전특위 2회, 윤리특위 1회, 여성특위 1회, 환경보전대책특위 3회, 도시시설물안전점검 및 재해대책위 2회, 해외교류증진특위 2회로 예결특위를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중 여성관련사안을 다룬 상임위는 보건사회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가 있으며, 10회에 걸쳐 여성관련 사안을 다루었다. 이는 전체 10개 위원회에서 임시·정기회의를 159회 개최한 것의 6.3%에 불과하며 10회 회의중 여성문제를 일부 다룬 것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여성관련사안의 비중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6개월 시한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이후 회의를 갖지 않았다.

96년 5월 현재 서울시의원 147명중 여성의원은 8.8%인 13명으로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위원회에 4명, 문화교육위원회에 3명, 운영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 각각 2명, 생활환경·수자원관리·도시정비·교통위원회에 각각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여성위원장은 안순덕 문화교육위원장 1명뿐이다. 위원장의 경우도 여성에게 30%이상 할당하여 여성지도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분석의 한계

시의원의 역할은 시정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혹은 정책대안 제시자로 규정되어 지고 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했나 평가하기 위해서는 출결상황, 발언횟수 등의 성실도를 1차적으로 살펴야 하고, 질의내용의 깊이·특정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까지를 파헤치는 열성, 비판적인 태도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책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 등을 살펴 의원별 종합점수까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속기록에 나타난 활동만으로는 이를 산출할 수 없다. 그나마 속기사가 부족하여 현장시찰을 나간 경우에는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집단준비과정을 거쳐서 특정 의원이 질의한 경우 대표질의한 특정의원의 성과로 기록된 한계도 있고, 처리결과에 추궁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의원간·공무원간의 사전 조율과정에 노력한 의원들을 파악할 수 없고, 질의내용과 의원의 이해관계 여부를 알 수 없는 한계때문에 종합평가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어서 속기록 분석을 통해 행정에 대한 감시정도와 정책능력 파악 정도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만을 분석해 본다.

다음에서는 여성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여성관련 주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3. 분석

보건위원회 【여성부문】

보건사회위원회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강남병원 업무 등을 다루고 있는데 95년 7월 14일부터 95년 12월까지 총19회 회의(39시간 48분 소요)를 했고, 그중 6회(31.6%)에 걸쳐 여성관련 사안을 다루었다. 여성관련 안전은 다음과 같다.

- 95년 8월 18일 가정복지국 소관업무 보고
- 95년 9월 22일 구로부녀복지관 소관업무 보고 및 현장시찰
- 95년 10월23일 19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 95년 10월25일 가정복지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 95년 12월 4일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95년 12월 6일 19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95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가운데 여성관련 소관기관에 대해서는 3개소(16.7%)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 걸린 시간은 총 44시간 54분이고 이중 여성관련감사시간은 8시간 35분(19.2%)이다. 여성관련 피감사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95년 11월 21일 노원부녀복지관
- 95년 11월 22일 가정상담소
- 95년 11월 28-29일 가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다. 95년 12월 26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여성관련사업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보사위 15건중 3건이었다.

- 부녀복지관 기술교육 이후 취업을 저조에 따른 교과과정 개발 촉구
- 부녀복지관의 교육기간(4개월)확일화. 효율적으로 신속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96년도 사업계획중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제정후 기금조성할 것

또한 보사위 주요 건의사항 11건중 여성관련 사안은 3건이었다.

- 가정상담소 직제를 독립기구화하고 직원을 일반직으로 할 것
-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 수강생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 어린이집 운영이 교육위주가 아닌 보육위주가 되도록 건의

현장방문은 8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여성관련 방문은 1개소(95년 12월 마포부녀복지관)였다.

기타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가졌는데 1차는 '95. 9. 15- 16일에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보건의료관계에 대해, 2차는 11. 15- 16일에 '95 행정사무감사 및 '96 예산안 심의를 위한 내용이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출석율은 82.9%로 상임위원회의 평균 출석율 86%에 못미치고 있다.

보건사회위원회 의원가운데 2명의 의원이 전체 7)발언의 44.2%에 해당하는 105회 질의를 하였고 이들의 긍정적 발언은 전체 긍정적 발언의 57.3%에 해당하는 75회로, 발언이 소수 의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6명의 의원중 여성의원이 4명인데 평균출석율은 89.5%로 보사위 평균출석율보다 높고, 발언횟수 5위안에 3명이 포함되어 1명을 제외한 여성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발언 횟수 5위안에 1명이 포함되어 발언횟수에 비해 심도있게 질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8회에 달하는 발언내용을 주제별과 발언의 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5-4] 보사위 여성관련 발언의 주제별 분류

복 지:	정책및운영	25회 (지적-16 비판-4	=20 [긍정적 발언 80%	기타-5)
(111회) 기타 복지관	7회 (지적-4	= 4 [" 57.1%	기타- 3)	
가정상담소	16회 (지적-9 비판-1 대안제시-1	=11 [" 69%	기타- 5)	
보육사업	51회 (지적-23비판-9 대안제시-1	=33 [" 64.7%	기타-18)	
요보호여성	12회 (지적-3	=3 [" 25%	기타- 9)	
능력개발:구로부녀복지관	55회 (지적-30비판-1 대안제시-3	=34 [" 61.8%	기타-21)	
(102회) 노원부녀복지관	32회 (" -8 " -1 " -4	=13 [" 40.6%	기타-19)	
3개부녀복지관	13회 (" -12 " -1	=13 [" 100%)	
기 타	2회 (기타- 2)	
사회참여확대	12회 (지적-6	=6 [" 50%	기타- 6)	
자녀교육관련	6회 (기타- 6)	
건강 및 기타	7회 (지적-4	=4 [" 57.1%	기타- 3)	
합 계	238회 (지적-115 비판-16 대안제시-10	=141 [" 59.2%	기타-97)	

7) 발언수에서 의사진행, 보고성발언, 반복질문은 제외하고, 1회 질문에 다른 질문이 섞여 있을 때 각각 달리 회수에 포함시켰으며, 보충질의라도 추가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궁성·논쟁성 발언은 추가로 인정하였다.

복지부문이 111회로 46.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여성능력 개발부문이 102회로 42.9%를 차지하였다. 여성 능력개발 부문중 98%에 해당하는 100회의 질의가 부녀복지관에 집중되어 관심도가 가장 높은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확대, 자녀교육 관련부문은 각각 5%, 2.5%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는 의원들의 관심도와 예산의 비중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발언의 질을 분석하면 지적이 115회, 비판이 16회, 대안제시가 10회로 긍정적인 발언이 59.2%이다. 대안제시는 10회에 머물러 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주제별 질의횟수를 보면 구로부녀복지관 55회, 보육사업 51회, 노원 부녀복지관 32회, 복지정책 및 운영이 25회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발언의 질을 분석하면 의원들의 관심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긍정적 발언의 평균치 59.2% 이상인 경우는 복지정책 및 운영(80%), 가정상담소(69%), 구로부녀복지관(61.8%), 보육사업(64.7%)이고, 요보호여성이 가장 낮은 25%로 나타났다.

● 복 지

복지부문에서는 보육사업이 51회(45.9%), 정책 및 운영이 25회(22.5%), 가정상담소가 16회(14.4%), 요보호여성이 12회(10.8%) 논의되었다. 발언의 질을 분석하면 지적이 55회, 비판이 14회, 대안제시가 2회로 긍정적 발언이 71회(64%)이다. 이는 여성 관련 사안의 긍정적 발언 평균치인 59.2%보다 높은 것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발언이 높은 순서를 보면 정책 및 운영(80%), 가정상담소(69%), 보육사업(64.7%)이고 가장 낮은 주제는 요보호여성(25%)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의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5] 복지부문 질의내용 분류(102회)

보육사업	(51회) 운영내실화 34/시설확충 10/입소아동 3/재정 3/기타 1
정책 및 운영(25회)	예산 11/운영 7/정책 6/기타 1
가정상담소 (16회)	운영 11/재정 1/기타 4
요보호여성 (12회)	보호소3/성폭력2/가출부녀1/기술교육1/가정폭력1/윤락여성1 미혼모1/모자가정2
기타 복지관 (7회)	시설확충 3/운영내실화 2/재정 1/비리 1

시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나타낸 것은 보육사업에 관해서이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꼭 필요한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발언도 51회중 33회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주제보다 보육사업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영내실화에 대한 질의(34회)가 가장 많았는데 예산에 따라 집행이 안된 것을 집중 추궁하였고,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질의가 10회로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확충이 안되는 이유를 추궁하였다. 입소아동에 대한 질의는 3회로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자치구별 보육대상아동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라든가, 시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운영평가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준마련을 요구한 점 등이 돋보이는 질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 및 운영에 관해 25회 질의를 했는데 이 가운데 20회가 긍정적 발언이었다. 예산에 관한 질의가 11회로 전시행정정보다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예산집행을 요구하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또한 8)보건복지부의 가내시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궁하였다. 운영에 관한 질의는 7회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 활성화안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정책에 관한 질의는 6회 있었는데 보사환경국 사회과와 가정복지국 사업 중복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일원화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였다.

가정복지과 소속의 가정상담소에 관한 질의는 16회로 운영에 관한 질의가 11회이다. 사업상 실적이 많은데 직제상 표시가 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독립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녀복지과 상담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통·폐합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가정상담소를 포함한 여성복지시설이 북부지역에 편재되어 있음을 문제삼았다.

요보호여성에 대한 질의는 12회에 머물러 예산집행액에 비해 가장 소홀하게 다룬 복지부문 주제였다.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언급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본회의, 예결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서울시를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에서 집행기관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임에도 발언 횟수에서나 내용의 질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점은

8)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10월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서울시는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음해 초에 확정내시액이 다시 내려오게 됨에 따라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생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사위원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이 여성들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최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시의원의 관심과 집행력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의원들이 주요하게 지적한 발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예산불용액 문제

'94 세입 예산액 225억원중 203억원(국고15억, 노인교통비 구비 7억원 감소) 세출 예산액 832억9천만원중 685억6천만원 집행, 47억4천만원 이월, 100억원은 불용처리

↳ 불용내역: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및 기능보장비 8억원,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 3억3천8백만원,시립여자기술원 운영비4억9천6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금 1억2천8백만원, 8개사업소운영비15억2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0억7천6백만원, 전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액을 통고받아 익년도 예산을 편성운영. 당해년도 1, 2월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집행. 그 차액에 대해 추경조치, 예산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추경조치 못함. 구체적인 계획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된 것임.

■ 지방화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이달원 (79회 보사위2호)

↳ 그동안 복지문제는 성장위주의 개발정책과 국가나 관의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밀려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시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시절에 복지수혜를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행정관청에 전달할 수도 없었고 사실 관철시키지도 못했다.

상부에서 지시하는 예산에 맞게 수혜자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상의하달식 방식에서 벗어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상급기관이 현실실정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있다. 불필요한 보고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정책결정에 자율성이 없다.

↳ 정당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결손가정, 생보자 등 낙오자가 받는 복지라는 인식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복지사업비가 복지시설의 건립과 운영비로 거의 투입되어 실제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낮다.

■ 사회복지과목 단일화:이달원 (79회 보사위2호)

특별회계(도시개발, 교통, 주택 등)위주의 개발과 시설투자에 서울시 행정이 집중되니까 일반행정의 대표인 환경문제, 복지문제 예산책정이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복지비

항목에는 복지사업비, 보건환경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를 포함하여 순수 복지사업비는 더 미미한 수준이다. 순수 사회복지비만을 단일항목화해야 한다.

■ 자치구별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문제점과 자율성:홍승채 (81회 보사위5호)

기초단체명 / 보육해야 할 아동수	95년도 확충계획
강북구 / 815명	31개소
광진구 / 1,020	8
강서구 / 758	25
노원구 / 2,360	25

지금까지 시설확충계획으로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무조건적인 시설확충계획은 문제다. 예를 들어 강서구, 노원구의 보육대상 아동수가 다른데 확충 시설수가 같은 것은 문제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장소 125곳 중에 역점사업인데도 3건만이 달성된 점은 문제이다. 계획 세운 보건복지부, 세계화추진위에 돈을 요구하다가 세계혜택을 요구하고 돈주고나서 안하면 행정규제를 해야 한다. 계획은 정부에서 다 발표하고 대통령은 자기 선심 다 쓰고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이 실현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94년 시설 증·개축비, 개·보수비가 106건, 95년도에는 시설 증·개축비가 4건, 개·보수비가 21건 신청, 총11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3억6천만원만 지급. 이것도 앞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될 확율이 높다.

▶ 행정감사 주요지적사항

○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국 1995. 11. 28(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

홍승채) 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에게 준 곳이 몇개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병원도 법인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새마을유아원은 위탁시에 개인 또는 영리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그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뒤에도 그대로 위탁운영을 승계해서 했기때문에 - - -.

홍승채) 조례가 통과된 것이 1981년이고, 90년도 시설에도 영리법인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왜 현장감독 하나도 안하십니까? 다 조례법 위반이예요.

이달원) 어린이집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가 8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가 14년간을 한번의 개정도 없이 유효할 만큼 이 조례내용이 정책을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하세요 ---.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보육사업이나 정책을 펴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별도로 놔두고 그냥 임의대로 정책을 입안하셔서 시행을 해 왔던 증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지전달체계의 일원화

홍승채) 모자가정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급을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사업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상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전달 체계의 이중성, 복잡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예요.

↳ 사회복지업무중 사회과에도 업무가 있고 가정복지국에도 업무가 있기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지원을 받을 경우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어서---

홍승채) 복지전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일원화의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이나 보사환경국이 실지로 고민을 안해 주면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복지체계의 일원화가 될 수 없는 것이예요.

복지부문에서는 요보호여성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의원에 한정되어 질의가 이루어졌고 대안제시가 1회뿐인 점이 아쉬운 점이다.

●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능력개발 부문에서 질의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6] 능력개발 부문 질의내용 분류(102회)

구로부녀복지관(55회)	운영내실화 29 / 취업 및 능력개발 15 / 재정 10 / 기타 1
노원부녀복지관(32회)	" 19 / " 7 / " 4 / " 2
3개 부녀복지관(13회)	" 9 / " 3 / " 1
기타 (2회)	" 1 / " 1
소계 (102회)	" 57 / " 26 / " 16 / " 3

여성의 능력개발 부문에서는 구로부녀복지관이 55회(53.9%), 노원부녀복지회관이 32회(31.4%), 3개 부녀복지관이 13회(12.7%), 기타 1회(1%)로 부녀복지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언의 질을 분석하면 지적 50회, 비판 2회, 대안제시 8회로 긍정적인 발언이 58.8%인 60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로부녀복지관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 61.8%를 차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제시가 8회로 다른 주제보다 많았는데, 이는 부녀복지관의 비효율적인 운영 타개책을 나름대로 밝혔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질의 내용은 운영내실화로 57회이고, 부녀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예산액에 비해 활용도가 부진한 점, 운영 시정 조치에 대한 대책 등이 지적되었다. 취업 및 능력개발에 관한 질의는 26회로, 새로운 교과 도입·자격취득자가 적고 취업이 저조한 이유를 추궁하였다. 부녀복지관 설립의 목적이 여성의 능력개발에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게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에 관한 질의는 15회로 불용액과 예산 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가장 문제를 삼은 구로부녀복지관은 대지4,586평, 연건평1,796평의 3층 교육관, 기숙시설이 갖춰져 있는 3층 생활관과 52명의 직원이 일하는 부녀복지시설로 여성기술교육(4개월과정의 일반기술교육, 수강료28,000원/1년과정의 공공직업훈련, 무료), 생활문화교실(4개월 28,000원), 여성생활교육 등을 실시한 곳이다.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부진하여 의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은 곳으로 과목의 구태의연함, 시설의 비효율성이 추궁되었다. 그러나 운영의 비효율적 측면을 운영의 경직성에 두지 않고 '운영팀이 여성이어서'라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어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구로부녀복지관을 비롯한 노원, 마포부녀복지관은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에 근거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일반부녀자에 대한 기술교도 및 무료직업소개사업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직업교육이외 생활문화교실을 포함한 지역여성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 지역여성복지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적합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녀복지관'의 '부녀'의 의미는 여성을 가족내의 위치에서 파악하는 인상을 주고 미혼여성은 포함이 안되는 개념이어서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겠다.

행정감사 주요지적사항

○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국 1995. 11. 28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녀복지관 개선책

홍승채) 부녀복지관 운영방안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 프로그램 개발 등이 94년 3월에 나오고 시장한테 8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올초에 민간에게 과감하게 용역을 주든지,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다든지, 지금 모델케이스 개발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현 시점에서 맞는 교과목으로 재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투입을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교사를 새로운 사람을 쓸 수 없는 별정직 교사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문제가 한가지 있고요. 서울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달원) 그것이 프로그램 운영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차 지적하는 것이지만 부녀복지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설치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상 근로자후생시설의 범주에서 벗어나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여성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부녀복지관의 독립된 법적 근거의 제정이 시급한데 94년도에 조례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96년도가 오는데도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국산하의 직영사업소 8개 중에 부녀복지관 3개 사업소만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어요.

↳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의거 주 사업을 기술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 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의해서 부녀복지관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비중을 보면 기술교육, 일반 교양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등이 있고, 지금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공공직업훈련 기숙사 시설도 150개 시설에서 30명 밖에 안되고, 기술교육의 기록

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정선순, 박시하, 조재환, 최형신의원의 부녀복지관 개선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12회 질의에 머물렀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과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단체 지원 등에 대한 단순질의 수준이어서 서울시 의원의 무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조례제정 없이 여성발전기금 10억을 편성한 점과 서울여성위원회 구성문제였다. 이는 목적 및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추궁한 것이다.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불충분했다면 이를 비판하는 질의라도 있어야 할텐데 거의 없었고 중앙의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정책의 괴리정도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지적도 없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특별위원회도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후로는 한번의 회의도 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없었다. 최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의 주요영역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주제인 사회참여 확대부문에 대한 질의비율이 5%밖에 안된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이며, 21세기에 대비한 서울시 의원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 기 타

그밖의 질의내용으로는 자녀교육 관련과 건강문제들이 있다. 방과후 아동문제, 비행청소년문제 등이 거론되었지만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성관련 질의를 9회 했는데 복지부문이 7회, 에이즈대책1회, 유명 무실한 위원회 대책에 대해 1회 질의하였다. 복지부문가운데는 예산관련 4회, 보육사업 2회, 자치구 실정에 맞는 복지조례제정1회를 질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 증대에 관심을 보였다. 본회의와 예결특위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